

# 감사원 사전컨설팅 협회·기업 활용 가이드

공공기관 때문에 막힌 사업, 소송 전에 풀 수 있는 제도적 경로

## 핵심 포지션

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책으로 정리한 변호사들이, 협회와 기업의 실제 신청 전략까지 설계하는 전문센터

# 무엇이 바뀌었고, 왜 중요한가

감사원 사전컨설팅은 행정기관이 감사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안을 소송 전 단계에서 풀 수 있는 제도적 경로입니다.

WHAT

## 사전 의견

법령 해석·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.

WHY

## 면책 추정

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면 일정 요건하에 사후 감사에서 면책으로 추정됩니다.

WHO

## 협회·연합회

2026. 5. 4. 개정 이후,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·연합회를 통한 신청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.

## 한 문장 요약

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소극적 의사결정을 전제로, 감사원이 사전에 적법성·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협회·연합회를 통한 민간 사안 신청 가능성이 확대되면서, 기업은 개별 민원이나 소송에 앞서 업종 공통의 행정 쟁점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되었습니다.

## 이 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순간

-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이나 감사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
- 인허가·공공계약·조달·보조금·정산·공공시설 입점 조건 등에서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
- 동일 업종의 다수 회원사가 같은 행정 애로를 겪어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

# 기업과 협회가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상황

핵심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적법성·감사 리스크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구조인지 여부입니다.

## 01 인허가 지연

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을 이유로 허가·승인 결정을 장기간 보류하는 경우

## 02 공공계약·조달

입찰, 계약조건, 설계변경, 물가변동, 정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

## 03 공공시설 입점

임대료·수수료율 등 공공시설 계약조건이 사업 지속성을 위협하는 경우

## 04 보조금·지원금

지원 기준, 집행 가능 범위, 사후 정산 기준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

## 05 업종 공통 규제

동일 업종 다수 회원사가 같은 규제·인허가 문제를 겪는 경우

## 06 환경·에너지·개발

복수 법령·지침이 충돌해 담당 기관이 결정을 회피하는 경우

## 07 사후 분쟁 예방

감사·행정소송·국가배상으로 번지기 전에 행정 기준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

### 실무 포인트

협회·연합회를 통한 신청은 개별 기업 하나의 이해관계보다 업종 공통성, 회원사 권익 보호, 공익성 설명이 설득의 중심이 됩니다.

# 협회·연합회 신청은 요건 설계가 먼저입니다

민간 기업 사안이라도 협회·연합회가 바로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, 법인 자격·목적 범위·공익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

## 법인 자격

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령에  
설립 근거가 있는  
협회·연합회인지 확인합니다.

2

## 목적 범위

정관상 회원사 권익 보호, 산업  
발전, 공동 애로 해소 등 협회  
사무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.

3

## 공익 요건

불특정 다수의 공익 침해 우려  
또는 업종 전반에 미치는  
파급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.

## 신청 구조

개별 기업의 사실관계를 협회 차원의 공통 쟁점으로 정리하고,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서를 붙여 감사원에 신청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.



### 신청 제외 가능성이 있는 사안

법령상 명확한 사안, 자체 검토가 부족한 사안,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성 확인, 수사·소송·감사 진행 중 사안, 단순 민원 또는 책임 회피 목적

# 신청부터 의견서 수령까지의 기본 흐름

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하되, 중요한 사안은 60일 이내 회신될 수 있습니다.



## 핵심은 신청서 품질입니다

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단순 민원서 제출이 아닙니다. 감사원이 채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 구조, 사실관계, 공익성, 사후 감사 리스크 분석을 신청서 안에 설계해야 합니다. 신청서는 사실상 의견서의 초안입니다.

## 사전컨설팅과 사후 분쟁 대응의 차이

구분	사전컨설팅	사후 소송·감사 대응
시점	처분·분쟁 전	처분·손해 발생 후
목표	행정 기준 사전 정리	위법성·책임 사후 다툼
효과	사업 연속성 확보 가능	시간·비용 부담 증가 가능

# 신청 전 준비자료와 반려 리스크

사전컨설팅은 가능한지보다 어떤 구조로 신청할지가 중요합니다. 자료의 완성도와 쟁점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

## 준비자료

- 사실관계 정리표
- 관련 법령·고시·지침
- 기존 행정기관 회신자료
- 협회 정관 및 설립 근거
- 회원사 피해 또는 공통 애로자료
- 공익성 설명자료
- 사후 감사 리스크 분석
- 신청서 초안 및 검토의견서 방향

## 반려·보완 가능성이 큰 사안

- 이미 처분이 끝난 사안의 위법성 확인 목적
- 수사·소송·감사 진행 중인 사안
- 단순 민원 또는 기관 책임 회피 목적
- 법령상 결론이 명확한 사안
- 자체 검토와 관계자료가 부족한 사안
- 협회 사무 범위·공익성과 연결되지 않는 사안

### 점검 질문

우리 사안이 협회 차원의 공통 애로와 공익 요건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?

#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나

공개 사례와 실무 유형을 기준으로, 협회와 기업이 자주 마주치는 활용 가능 분야를 정리했습니다.

## 공공조달·임대차

**쟁점** 공공시설 입점 조건, 수수료율, 임대료 기준

**활용 포인트** 공공기관의 탄력적 계약 기준 마련과 사업 지속성 확보

## 공공계약·물가변동

**쟁점** 원자재 가격 급등, 공사비 조정, 설계변경

**활용 포인트** 사업협약·지침의 합리적 해석과 감사 부담 완화

## 공공노사·임금

**쟁점** 공공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, 성과급 기준

**활용 포인트** 노사 합의의 법적 안전판과 필수 인프라 운영 안정

## 환경·에너지·인허가

**쟁점** 복수 법령 해석 충돌, 인허가 장기 지연

**활용 포인트** 통합적 법령 해석 기준 마련과 사업 정상화

사례는 법률 검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. 실제 신청 가능성은 신청 주체, 사실관계, 협회 정관, 공익성, 기존 기관 검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
# 왜 법무법인 평정인가

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는 신청 전략부터 후속 감사·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.

## 평정의 업무 범위

- 신청 가능성 사전 진단 및 반려 리스크 점검
- 협회·연합회 신청 구조 설계와 공익성 논리 구성
- 법령 해석, 행정 리스크, 사후 감사 리스크 분석
- 사전컨설팅 신청서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서 작성 전략
- 감사원 의견서 이후 행정 처리, 감사 대응, 행정소송·국가배상 검토

## 차별점

### RECORD

#### 실무서 공동 집필

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다룬 실무서를 공동 집필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제도 구조를 분석합니다.

### STRATEGY

#### 신청서가 곧 의견서의 초안

사실관계·법령 해석·공익성·면책 요건을 감사원이 검토 가능한 문서 구조로 설계합니다.

문의: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· 대표전화 02-6953-1080

본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법률의견이 아닙니다.